

2011년 노사관계 평가와 2012년 전망

이 성 희*

I. 2011년 노사관계 평가

2011년 노사관계는 파업발생건수, 파업으로 인한 노동손실일수 등 통계적으로는 안정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한진중공업 정리해고를 둘러싼 희망버스 투쟁, 대학교 환경미화용역업체 노조원들의 투쟁에서 보이듯이 예전에 볼 수 없었던 새로운 투쟁의 바람이 거세게 일어나기도 했다.

여기에 기업 단위 복수노조 허용으로 500여 개의 신규 노조가 설립되면서 기업 내 복수노조 간 경쟁체제가 도입되었다. 또한 단체교섭 진행 과정에서 교섭창구 단일화제도가 도입되면서 단체교섭의 진행 방식에서도 새로운 양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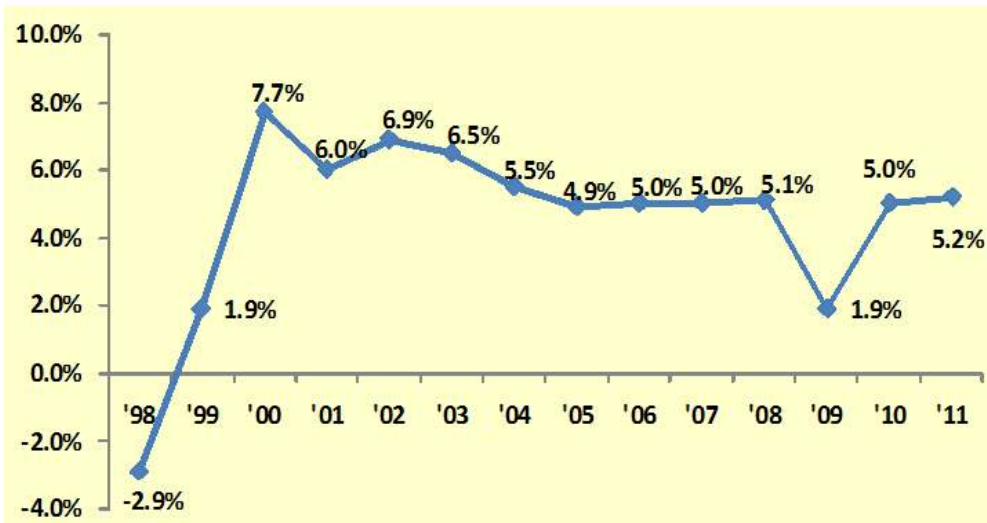
전반적으로 2011년은 기존의 전통적인 노사관계 영역에서는 안정화 추세가 지속됐지만, 노동시장 양극화의 그늘에서는 새로운 갈등 요인과 비정형적인 투쟁이 거세지기 시작하는 등 변화의 조짐들이 나타난 한 해였다.

1. 실질임금 하락과 정규직 - 비정규직 양극화

2011년 한 해 평균 협약임금 인상률은 5.2%로 2010년보다 약간 높았다. 그러나 물가상승으로 인해 실질임금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2011년 9월 기준으로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실질임금은 271만 8000원으로 2010년(281만 6200원)에 비해 3.5%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실질임금 감소폭은 외환위기 직후였던 1998년(-9.3%),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졌던 2008년(-8.5%)에 이어 세 번째로 큰 폭의 하락이다. 이러한 실질임금 인상률의 하락은 그만큼 근로자들의 주머니 사정이 팍팍해졌음을 보여준다.

*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musedori@kli.re.kr).

[그림 1] 연도별 10월 말 협약임금 인상률 추이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격차는 2000년대 이후 더 커지는 추세를 보여왔고, 이러한 현상은 2011년에도 개선효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임금격차 뿐만 아니라, 대부분 기간제 근로형태를 띠고 있어 끊임없는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게다가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경우가 많아 사회안전망의 혜택에서도 소외되어 있다. 이렇게 비정규직 문제가 점차 심각해지면서 비정규직 노사갈등도 잦아지고, 사회적 파장도 점차 커져가고 있다. 2011년 초에 대학 환경미화용역업체 노조원들의 투쟁에서 유명인들이 지지의사를 밝히면서 사회적 쟁점으로 비화되기도 했다. 이는 비정규직 문제가 노사관계의 영역을 넘어 국민적 관심사이자 사회정치적 쟁점이 돼가고 있음을 방증하는 사례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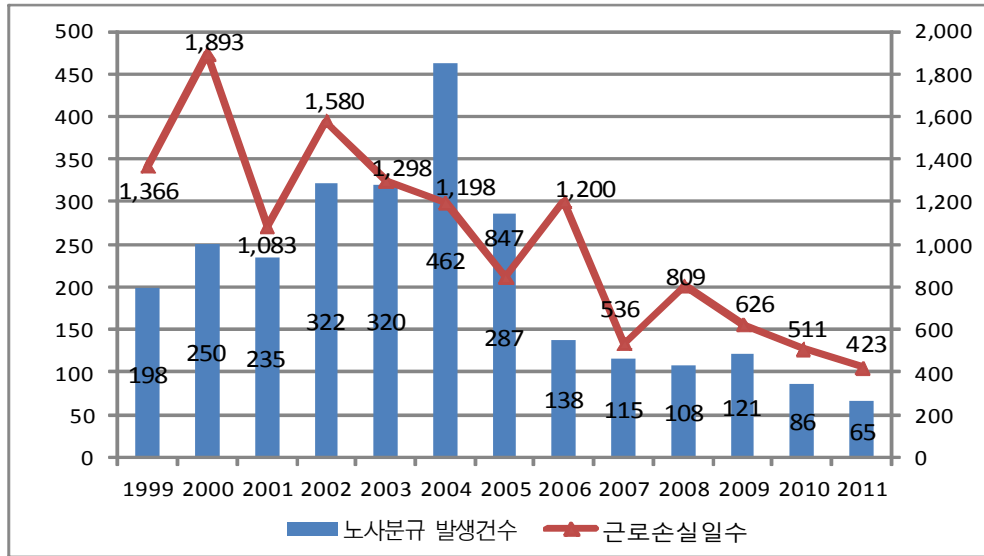
2. 파업발생 및 노동손실일수 감소 추세

2011년 12월 21일 기준 파업발생건수는 65건으로 2009년 이후 파업발생건수 감소 추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파업으로 인한 노동손실일수도 2011년 12월 21일 기준 42만 3천 일로 2000년대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파업발생과 파업으로 인한 노동손실일수도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단체교섭 과정에서 노사갈등이 점차 줄어드는 추세를 반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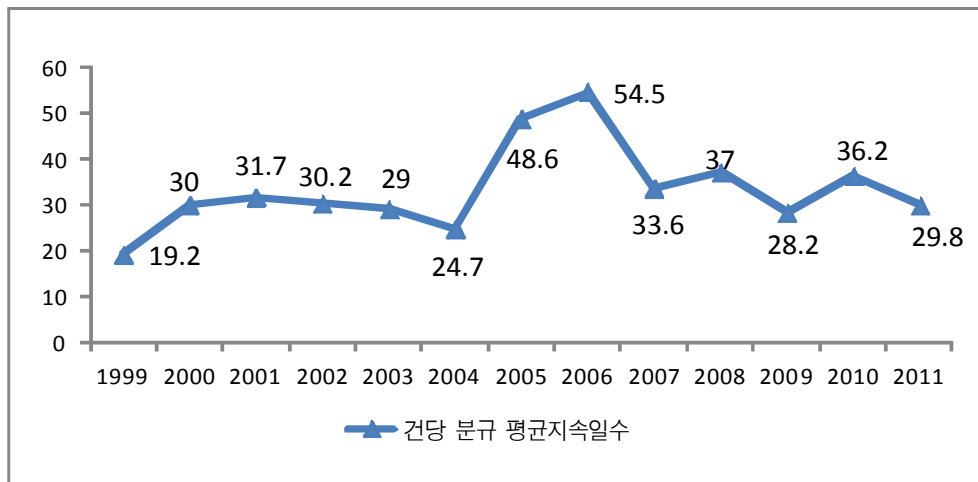
[그림 2] 연도별 노사분규 발생건수 · 근로손실일수

(단위: 건, 천 일)



2011년에는 파업지속일수도 2010년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파업지속일수가 감소했다는 것은 파업이 장기화되는 경우가 그만큼 줄어들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한진중공업이나 유성기업 등 일부 사업장을 제외하면 장기파업 사업장은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림 3] 연도별 건당 분규 평균지속일수



전체적으로 보면 2011년에는 파업발생건수도 적었고, 파업으로 인한 노동손실일수도 줄어드는 등 전통적인 노사관계 영역에서는 안정적인 노사관계 추세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3.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새로운 투쟁 양상

올해 노사관계에서 가장 주목을 받았던 사건은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투쟁이었다. 2011년 2월 한진중공업이 170여 명의 정리해고를 발표하면서 노조는 정리해고 반대 파업에 돌입하였고,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지도위원은 85호 크레인에 올라가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다. 한진중공업 노조와 김진숙 지도위원의 농성에 민주노총과 시민단체 등이 지원투쟁에 나서기도 했다.

이러한 한진중공업 노조의 정리해고 반대 투쟁이 전국적인 관심을 끌게 된 것은 김여진, 김제동 등의 연예인들이 한진중공업 노조 투쟁에 지지의사를 밝히고, 송경동 시인 등이 제안한 희망버스 투쟁이 시작되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김진숙 씨가 타워크레인 농성 진행 상황을 매일매일 트위터로 알리면서 시민단체와 젊은 층에 투쟁지지 분위기가 확산되었고, 이는 다섯 차례 희망버스 투쟁으로 이어졌다.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으로 연락을 받은 시민, 대학생, 직장인들이 삼삼오오 희망버스에 타고 부산 영도 조선소 앞에서 정리해고 반대 지지투쟁을 벌임으로써 한진중공업 노사갈등은 전국적인 관심사가 되었고, 급기야 정치권에서도 가세하면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한진중공업 대표가 정리해고자 조기 복직을 약속하기에 이른다.

이러한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반대투쟁에서는 기존 노사관계에서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양상이 나타났다. 기존 정리해고 반대투쟁은 해당 노조와 상급단체가 가세하는 투쟁이 중심이었다면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투쟁에는 국민적인 관심을 끄는 연예인들이 참여하고 시민단체와 노조와 상관없는 직장인, 시민들이 대거 참여하는 양상이 나타났다. 한마디로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투쟁은 기존의 정규직 중심의 노조운동의 틀을 벗어난 투쟁 양태를 띠었다는 것이다. 또한 희망버스 투쟁이 확산되는 방식도 기존의 노조 조직이 아니라 SNS라는 새로운 매체를 통해서 불특정 다수에게 소식이 전파되고, 그것이 공감을 얻으면서 투쟁이 조직되는 새로운 투쟁 양상으로 나타났다. 노사관계에서 한번 효과가 입증된 투쟁 방식은 반복해서 나타나는 경로의존성이 존재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도 이러한 투쟁 방식은 재연될 가능성을 안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4. 복수노조 허용으로 인한 노사관계 지형 변화

지난 2011년 10월 말까지의 진행 상황을 보면 복수노조가 허용된 지 4개월 만에 552개의 신규 노조가 설립되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의 노동조합 수가 매년 150~200개 정도씩 줄어드는 추세였던 것에 비하면 7월 이후로는 노조설립 붐이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복수노조 설립이 줄을 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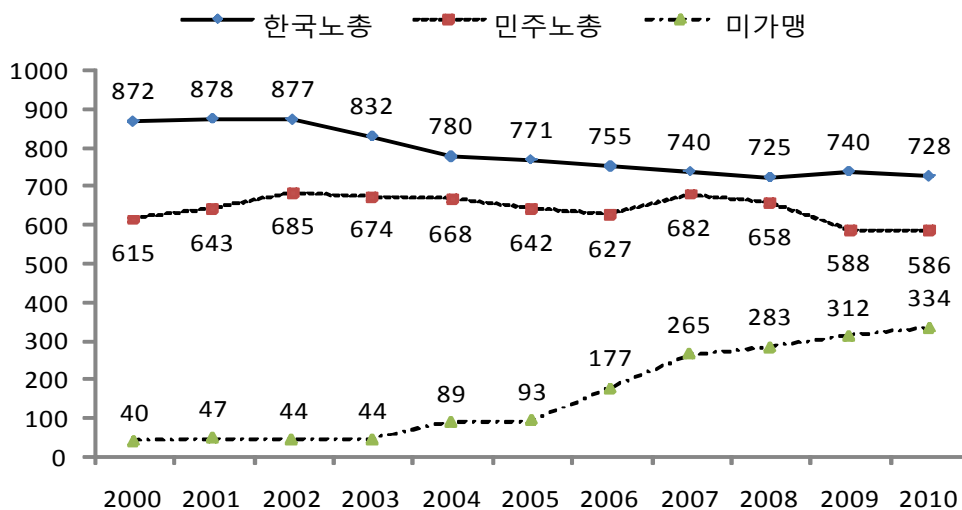
10월 말까지 복수노조 설립 사업장 현황을 보면 한국노총 소속 사업장에서 분화한 노조가 183개, 민주노총 소속 사업장에서 분화한 노조가 142개, 미가입 사업장에서 분화한 노조가 53개 등으로 한국노총 소속 사업장에서 분화한 복수노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버스·택시 등 운수 업종(258개)을 제외하면 민주노총 소속 사업장에서 복수노조 설립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신설된 복수노조의 상급단체 가입 현황을 보면 양대노총에 가입한 노조는 14% 밖에 되지 않고, 86%는 상급단체를 선택하지 않아 미가입 노조로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복수노조 시대에 미가맹 노조의 비중이 더 커질 수 있음을 예고하고 있다.

복수노조 시대에 또 하나 주목할 것은 노동조합 조직률 변화 추이다. 복수노조 시대의 개막과 함께 복수노조 설립이 줄을 잇고 있는데 이러한 노조설립이 어느 정도의 노조 조직률 상승과 조합원 수 증가로 이어질 것인지가 향후 노조활동 세력판도를 좌우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10년 10월 말까지의 진행 상황을 놓고 보면 복수노조 설립으로 노조 수는

[그림 4] 상급단체별 조합원 수 증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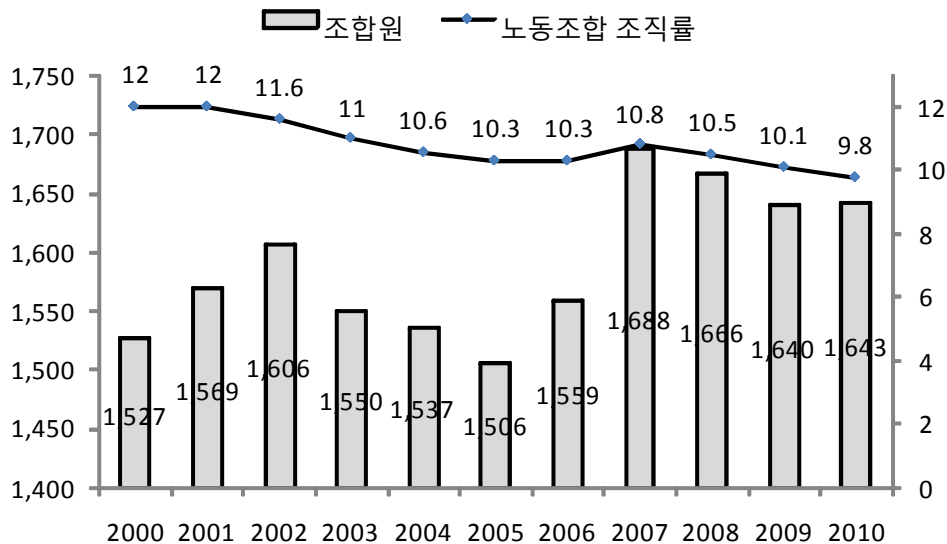
(단위: 천 명)



10% 정도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렇다면 노조 조직률 증가는 어느 정도나 될까? 2010년 노조 조직률이 9.7%였던 점을 감안하면 약간의 조직률 증가 효과는 있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러나 신설 노조 중에 조합원이 10인 미만인 노조가 42%나 되는 등 소규모 노조가 많아 실제 노조 조직률 증가는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림 5] 노동조합 조합원 수 및 조직률 추이

(단위: 천 명, %)



5. 양대노총과 정부의 노정갈등 격화

2011년 정부와 노동계의 관계는 2010년보다 더 악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2011년 1월 한국노총 선거에서 MB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견지했던 이용득 위원장이 1차 투표에서 당선이 되었다. 이용득 위원장은 당선 직후부터 정부여당과의 정책연합 파기를 선언하면서 민주노총에 연대를 제의했다. 한국노총은 그 이후로도 근로시간면제제도와 복수노조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노동법 개정 요구를 앞세워 정부와 갈등관계를 형성했다. 또한 상급단체 파견 전임자 임금지급을 둘러싸고 정부 및 경영계와 치열한 논쟁을 전개하기도 했다.

한국노총은 2011년 12월에 출범한 통합민주당 창당에 직접 참여하면서 정치적으로도 정부여당과 대립하는 관계를 형성하였다. 전체적으로 2011년에는 노동계와 정부의 갈등지수가 더 높아지고, 정치적인 갈등관계로 확산되는 양상이 나타났다.

II. 2012년 노사관계 전망

1. 경기침체와 구조조정에 따른 노사갈등 가능성

2011년부터 시작된 유럽발 경제위기의 영향으로 우리나라의 2012년 경제성장률은 4% 아래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경기침체의 영향과 관련해 주목할 변수는 기업의 구조조정 등의 고용문제와 노동시장 양극화 문제일 것이다. 특히 구조조정 문제는 노사간 첨예한 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서 2012년 노사관계의 주요 변수가 될 가능성이 크다.

수출의존도가 높은 산업의 경우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구조조정 압박이 더 강할 수밖에 없고, 대기업에서도 구조조정을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2009년 쌍용차, 2011년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반대투쟁에서 보듯이 대기업 구조조정은 극심한 노사갈등과 함께 사회적 쟁점으로 확산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2012년에는 대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의 노사갈등을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표 1〉 우리나라의 2012년 경제성장률 및 소비증가율 전망치

	경제성장률	소비증가율
기획재정부	3.7%	3.1%
한국은행	3.7%	3.2%
삼성경제연구소	3.6%	2.5%
LG 경제연구원	3.4%	2.9%
한국경제연구원	3.5%	2.6%

2. 정치의 계절, 노동조합의 선거참여 결과‘변수’

2012년에는 4월 총선과 12월 대선이라는 큰 선거를 눈앞에 두고 있다. 이러한 정치의 계절에는 노동조합의 정치활동 참여가 노사관계 주요 변수가 되기도 하고, 노사관계 쟁점이 정치적 쟁점이 되기도 한다. 그만큼 정치적 변수가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2012년 노동조합의 선거 참여와 관련해서 가장 주목되는 것은 한국노총의 민주통합당 참여와 민주노총의 통합진보당 참여라고 할 수 있다. 현재 한국노총은 민주통합당 창당

과정에 직접 참여해 오고 있다. 이에 따라 민주통합당 조직체계에 직접 참여하면서 4월 총선에서도 한국노총 추천 후보를 낼 가능성이 크다. 민주노총도 통합진보당 총선후보 공천 과정에서 민주노총 출신 후보를 적극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

양대노총은 이외에도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의 총선 공약에 노동조합의 정치적 요구를 적극 반영하려 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2012년 4월 총선에서는 노동계의 정치적 영향력이 예전보다 많이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 그 영향력의 크기가 어느 정도 될지는 4월 총선에서 노동계 출신 후보가 몇 명이나 당선이 되는지에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2012년 정치의 계절에 또 하나 주목할 것은 노사관계 쟁점이 정치적 쟁점으로 비화될 가능성이다. 정치의 계절에는 사회적 쟁점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노사관계 쟁점이 정치적 쟁점으로 비화할 가능성은 높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양극화 문제,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문제, 대기업 구조조정 문제 등과 같이 사회적 이슈로 확산되기 쉬운 쟁점이 불거질 경우 노사관계 쟁점의 정치화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3. 복수노조 시대의 노동조합 운동 변화

가. 복수노조 설립 추세와 노조 조직률 전망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해서 2012년 가장 주목되는 변수는 복수노조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노동조합 설립과 노조 조직률 상승 추세가 어느 정도 지속될 것인지에 관한 것이다. 과거 교원노조 합법화(1999), 공무원노조 합법화(2007)에서 노조 조직률이 합법화된 노조 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증가했다가 안정세로 접어들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복수노조 법 시행 효과도 2012년까지는 노조수나 조합원 수 증가효과로 이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실제로 복수노조 법시행 효과는 2012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2012년 상반기에도 노조설립건수나 신규 노조 가입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러한 노동조합 조직확대 추세가 얼마나 강도 높게 지속될 것인지 하는 것이다.

2011년 7~8월 매일 10개 정도의 노조가 설립되던 추세에서 12월에는 매일 1개 남짓한 수준으로 낮아졌던 점을 감안하면 복수노조 법시행 효과로 인한 노조설립 붐이 강하게 지속되지는 않겠지만 어느 정도는 증가 추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실제 신규 노조설립과 조합원 수 증가가 어느 정도 이루어질 것인지는 2012년 상반기 단체교섭에서의 임금 및 근로조건 향상 효과와 함께 4월 총선에서 노동계 정치활동이 어느 정도 좋은 실적을 보이느냐에 따라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나. 복수노조 시대의 단체교섭제도 정착 본격 시험대

2012년에는 복수노조 시대에서의 단체교섭제도가 어떠한 양상으로 정착될 것인지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복수노조 제도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다보니 2011년에는 단체교섭을 7월 1일 이전에 타결하는 사업장도 많았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2012년에 복수노조 시대에서의 첫 단체교섭을 하게 되는 사업장도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2010년 이전부터 복수노조가 존재해온 사업체의 경우에는 2012년 7월부터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가 적용된다. .

이 점에서 2012년은 복수노조하에서의 단체교섭 관행이 어떤 모습으로 정착될 것인지를 가름하는 한 해가 될 것 같다. 복수노조하에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정착될 것인지, 사용자 동의를 통해 복수노조 간 개별교섭을 인정하는 관행이 어느 정도 차지할 것인지, 복수노조들 사이에 교섭창구 단일화를 어떤 방식(공동 또는 과반수 독점)으로 할 것인지 등 복수노조하에서의 단체교섭 관행이 본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4. 비정규직 양극화와 비정규직 사회정치적 쟁점 부상

2012년에 주요한 노사관계 쟁점 중에는 정규직·비정규직 간 양극화 심화 문제가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노동시장 양극화 문제는 점차 심화되는 추세에 있고, 2012년에는 경기침체로 인해 기업들이 인건비 절감을 위해 비정규직 임금인상 억제, 정규직 업무의 용역 전환, 비정규직 인력 감축 등에 나설 것으로 보여 비정규직 문제가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 비정규직 문제가 쟁점으로 부상할 경우 2012년 양대 선거를 앞두고 곧바로 정치적인 쟁점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로조건과 고용불안,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문제에 대해서는 일반 국민들도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데 공감하는 분위기라서 정치권에서도 비정규직 문제를 적극적으로 다루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정부에서도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을 발표하는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개선에 대해 적극적인 정책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2011년 12월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을 제시하면서 상시업무를 담당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각종 수당 등 근로조건을 개선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여기에 공공부문에 고용공시제를 도입해 공공부문에서 용역을 사용할 경우 용역업체 노동자들의 임금과 근로조건을 투명하게 감시하겠다는 계획도 밝힌 바 있다.

이렇게 2012년에는 경기침체로 인해 비정규직 문제가 더 심각해질 가능성을 안고 있고, 이러한 비정규직 문제가 정치적 쟁점으로 비화될 여건도 조성돼 있어 비정규직 문제가 주요한 노사관계 변수가 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5. 근로시간단축 및 교대제 개편 추진성과‘관심’

2012년에 노사관계에서 또 하나 주목할 필요가 있는 쟁점이 근로시간단축과 교대제에 대한 개편이다. 근로시간단축과 교대제 개편 문제는 이미 2011년 말에 정부에서 현대차의 초과근로시간 관련 근로기준법 위반 시정조치를 하면서 수면 위로 떠오른 상태다.

2012년에는 경제성장률 하락으로 인해 고용사정이 더 어려워질 전망이고, 그만큼 일자리창출을 위한 정책 수요가 커질 수밖에 없다. 이 점에서 우리나라의 장시간 근로관행을 개혁해서 한편으로는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이를 일자리창출로 이어지게 하려는 근로시간 단축정책의 중요성이 더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근로시간단축과 일자리창출 능력 제고를 위해 완성차업계의 교대제 개편을 통한 근로시간단축 움직임이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근로시간단축 및 주간 2교대제 전환 움직임은 자동차산업 전체의 근로시간 관행에 파급될 수 있기 때문에 노사단체 모두에게 초미의 관심사다. 게다가 2011년 말 현대차노조 집행부의 교체로 민주노총 금속노조는 근로시간단축과 교대제 개편 추진에 대한 목소리를 더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점에서 2012년에는 완성차업계에 근로시간단축 실험이 어느 정도 성과를 낼 것인지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KLI**